



이태종
중앙일보 NIE (신문활용교육)팀장
taejong@joongang.co.kr

영국의 철학자이며 사회사상가인 버트란트 러셀(1872~1970)은 “권력이란 의도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했다. 즉, 권력은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을 자기 뜻대로 하도록 통제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힘이 정치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 조직되는 경우 정치권력이라고 하며, 이를 공권력 또는 국가권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가권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찰·군대·교도소 등의 물리적 강제력을 합법적으로 가지고 행사할 수도 있다.

권위는 ‘정당성을 획득한 권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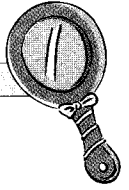
권력과 권위는 인간을 복종시키는 힘이라는 의미에서 흔히 동의어로 사용했다. 그러나 권력은 사람들이 그 정당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권위가 된다. 권위는 ‘정당성을 획득한 권력’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권위는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용인하는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되는 권위가 다른 사람에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권위를 세우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는 왕관·법복, 호화로운 궁전 등의 심벌, 사회 질서 유지, 이



정당한 권위



성적인 설득 등 다양하다. 권위가 제도로 확립되면 그 실질적 가치에 관계없이 통용되며, 무능한 군주도 군주로서 복종을 받는다.

그러나 권위가 한 사람에게 집중돼 비판이 허용되지 않을 때는 권위주의가 된다. 권위주의자 또는 권위주의적 사고는 힘을 맹신하며, 반이성적인게 특징이다.

인간의 역사는 이러한 권위주의로부터 벗어나려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교회나 왕후의 권위가 개인의 자유와 이성의 존엄을 지키려는 사상에 의해 붕괴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지난 3월 9일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가운데 헌정사상 처음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토론이 있었다.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검사들이 반발하자 대통령이 설득에 나선 것이 토론의 계기였다.

대통령과 검사토론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고 국민에게 다가서는 대통령의 모습은 일견 좋아 보인다. 어떤 이들은 '신선하다' '파격적이다' '탈권위주의적이다' 등 여러 가지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검찰 인사 문제로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당사자인 검사들이 갑론을박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국가 행정관청이다. 검사도 권위의 상징이지만 국가 최고 통치권자의 권위와 견주어서 성립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元首)로 외국에 대해 나라를 대표한다. 또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 나라의 중대

한 일을 결정하고 이끈다.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일정한 권위가 보장돼야 효율적으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다. 그런데 토론회 자체가 대통령의 권위를 손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 국정 운영에서 대통령의 권위가 서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없으면 자식 훈육에 말보다는 회초리를 들어야 하고, 경찰이 권위가 없으면 교통 위반 딱지를 댈 때마다 말싸움하느라 시간이 낭비되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정당한 권위 인정해야 비용 감소

대통령이 과거처럼 권위주의에 빠져 있다면 몰라도 고유의 법적 권한인 인사권 행사를 놓고 검사들이 시시비비를 따지자고 하는 자체는 토론 거리가 아니다. 대통령도 사사건건 갈등을 증재하려고 나설 게 아니다. 권위를 가지고 국정에 임해야 하며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 줘야 한다. 권위는 비용을 최소화하며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물처럼 흘러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과거 우리 사회의 권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권위주의의 증명을 앓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당한 권위마저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다. 행정관청을 포함해 사회 이익집단들이 매사에 권위를 부정한다면 비용 증가는 물론이고 사회 존립 자체가 어렵다.

이제 정당한 권위를 세우고 인정하는 사회 풍토를 만들어야 할 때다. PPFK